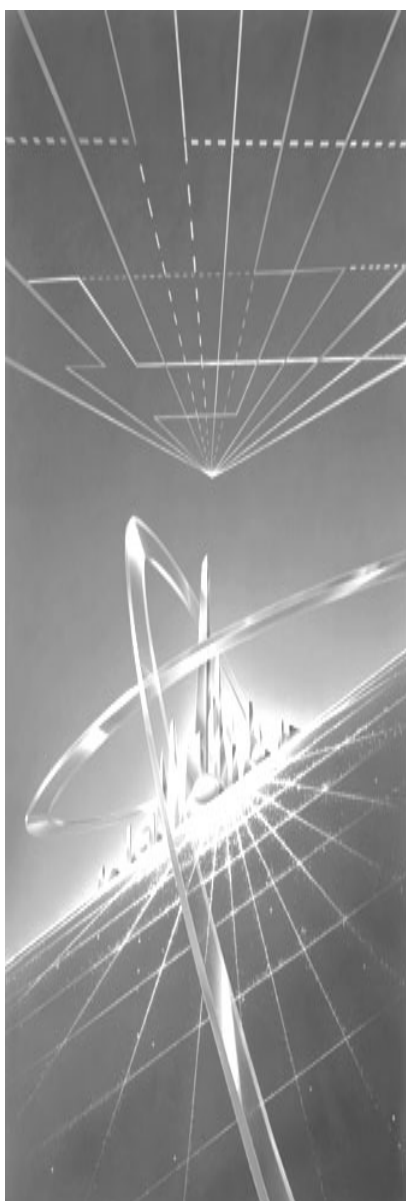




건설동향브리핑



제 95 호 (2005. 8. 16)

- 경제 : 2004년 건설업 통계 조사
2005년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 정책 : 새로 제정된 「지방계약법」의 주요 내용과
시시점
- 이슈 : 고용보험 전자카드제 도입
BTL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변화 및 개선 방안
- 정보 : 미국 환경 분야 건설 시장의 동향
- 논단 : SOC 재정 투자 더 필요하다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 초점

■ 지난해 건설업 매출 크게 증가, 영업 이익률은 소폭 하락

지난해 건설업체들의 매출은 크게 증가했지만 원자재가 상승으로 영업 이익률은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일반건설업체 1만 1,195개사의 작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총 128조 2,55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영업 이익률은 철근 등 주요 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져 전년보다 0.1% 포인트 떨어진 5.5%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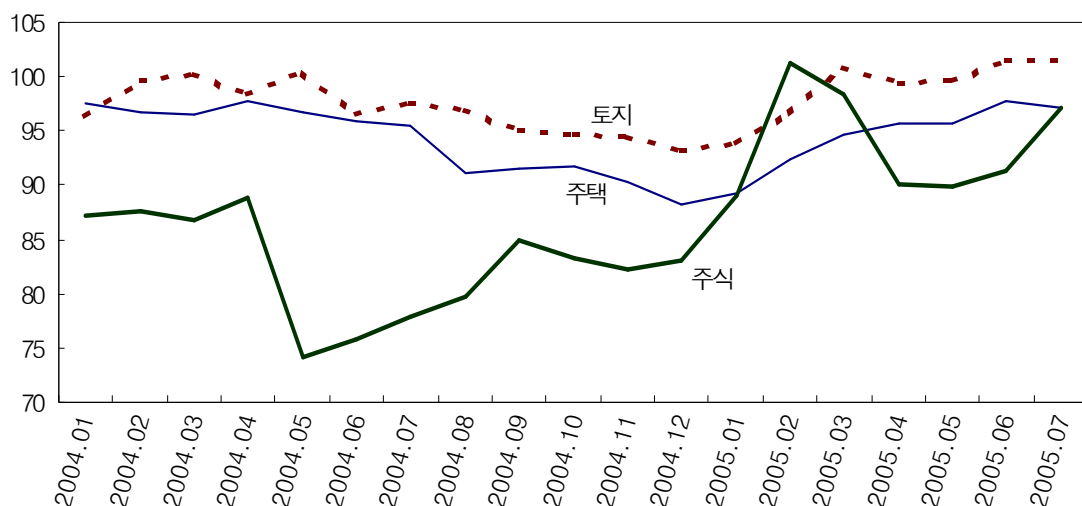
■ 울진 원전 5, 6호기 6년 만에 준공

한국 표준형 원전인 울진 원전 5, 6호기가 착공 6년 만에 준공됐다. 이로써 한국의 원자력 발전 능력은 1,780만kW로 200만kW가 늘어나게 됐다. 울진 원전 5, 6호기는 국내에 건설된 19, 20번째 원전으로 한국 표준형 원전(각 100만kW급 가압 경수로형)이다. 두 기의 원전 건설은 1999년 1월 시작해 6여 년 간 공사비 약 4조 4,700억원, 연인원 800만 명이 투입된 대형 국책 사업이었다.

■ 2005년 7월 소비자 자산 평가

- 올 7월 소비자 자산평가를 보면 금융부문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음.
 - 토지 및 임야가 전월과 비슷한 가운데 주택 및 상가부문은 전월보다 소폭 하락함.
 - 반면 금융저축부문은 전월과 비슷하나 주식 및 채권부문이 크게 상승함.

자산 평가 지수 추이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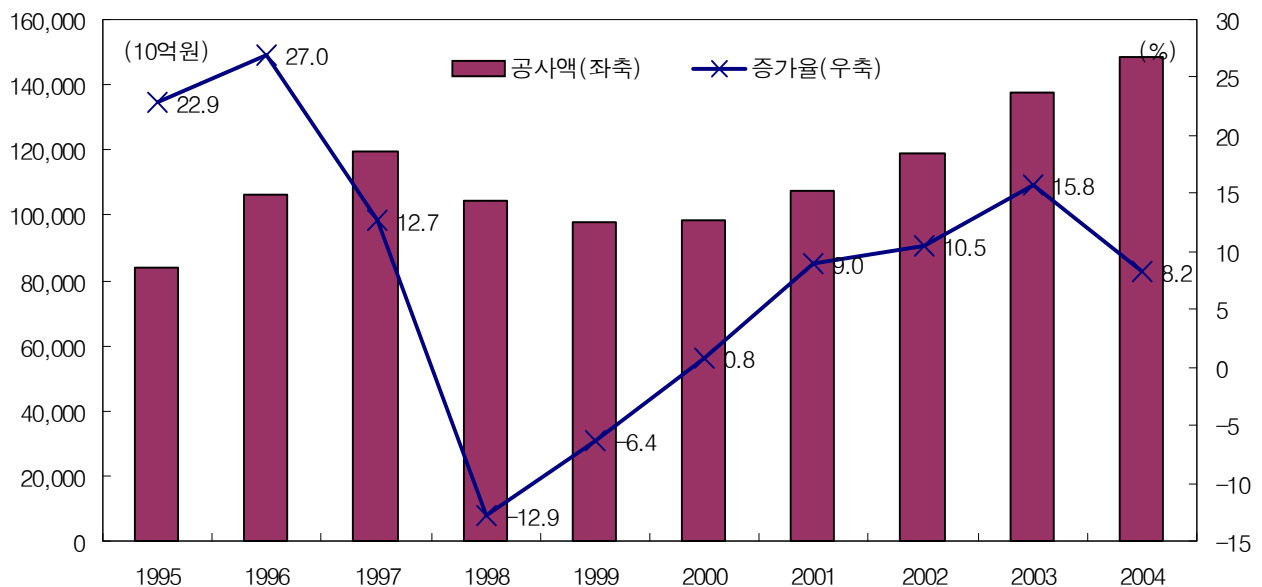
2004년 건설업 통계 조사

- 건설업체당 공사액 외환위기 이후 19.3% 감소 -

■ 외환위기 이후 6년 만에 증감률 둔화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중 건설업체가 시공한 전체 공사액은 총 148조 7,47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2% 증가함.
 - 종합건설업체의 공사액은 총 65조 6,320억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함.
- 그러나, 건설 공사액의 증가율은 2003년에 비해 7.6%p 낮아짐.
 - 건설공사액은 2000년에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어 왔으며, 증가폭 또한 확대되어 옴.

건설 공사액 추이



자료 : 통계청.

- 발주자별로 보면 국내 건설 공사액은 8.9% 증가한 반면, 해외건설 공사액은 7.9% 감소함.
 - 국내 건설 공사액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발주가 각각 전년 대비 7.8%, 9.6% 증가함. 그러나 증가율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짐.
 - 해외건설 공사액은 4조 7,170억원으로 2003년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됨.

- 공사 종류별로 보면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는 각각 전년 대비 9.9%, 7.2% 증가함.
- 그러나 증감률은 2003년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으며, 특히 건축공사의 경우 2003년(22.4%)에 비해 크게 낮아짐.

업종별 발주자별·공종별 공사액

(단위 : 10억원, %)

구분		공사액			증감률	
		2002년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합계		118,653	137,422	148,747	15.8	8.2
업종별	종합건설업	52,847	61,534	65,632	16.4	6.7
	전문직별 공사업	65,806	75,888	83,115	15.3	9.5
발주자별	국내	112,843	132,299	144,030	17.2	8.9
	공공	48,676	51,811	55,868	6.4	7.8
	민간	63,714	79,957	87,633	25.5	9.6
	기타	453	531	529	17.2	-0.4
	해외	5,810	5,123	4,717	-11.8	-7.9
공종별	건축	65,575	80,274	88,245	22.4	9.9
	토목	47,268	52,025	55,785	10.1	7.2

자료 : 통계청.

■ 2004년 기업당 공사액 1998년 대비 80.7% 수준

- 2004년의 기업체당 평균 공사액은 21억 3,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5.4% 증가함.
- 종합건설업의 경우 59억 4,000만원으로 2003년(55억 1,000만원)에 비해 7.8% 증가함.
- 건설업체당 평균 공사액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대비 80.7% 수준임.
-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이후 기업체 수는 54.0%나 증가한 반면 공사액은 24.2% 증가에 그쳐 업체당 평균 공사액은 20% 가까이 감소함.
- 업체당 평균 공사액은 10년 전인 1995년(21억 2,000만원)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함.

1997년 대비 기업당 공사액

(단위 : 억원, %)

구분	기업체 수	공사액	기업당 공사액
2004	69,761(154.0)	1,487,470(124.2)	21.3(80.7)
1997	46,498(100.0)	1,043,290(100.0)	26.4(100.0)

2005년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 경기 회복에 대한 부정적 시각 증가 -

■ 2005년 7월 CBSI 12.2p 하락

- 2005년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4.2를 기록함.
 - CBSI는 올해 들어 지수가 완만히 상승하여 왔으나 7월에는 12.2p 하락함.
 - 이는 경기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업체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함.
- 최근 들어 지속되고 있는 업체의 양극화 현상은 7월에 더욱 심화됨.
 - 대형업체는 100.0을 기록하여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중견업체와 중소기업체는 전월대비 각각 14.0p, 15.9p감소함.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와 지방업체가 각각 86.4, 59.8로 조사됨.
 - 규모별 체감경기의 격차는 58.5p로 규모별 조사가 시작된 2001년 5월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냄.

■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부정적 시각 증가

- 8월 전망지수는 69.3을 기록함.
 - 전망지수는 지난 6월 전망치(106.6) 이후 2개월째 큰 폭으로 하락함
- 대형업체가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조사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임.
 - 대형업체는 72.7로 나타났으며, 중견업체(70.6), 중소기업체(66.6) 역시 다음달 경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조사됨.

2005년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5월		6월		7월		8월 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경기종합 (가중지수)		82.9	96.4	86.4	106.6	74.2	88.9	69.3
규모별	대형	109.1	108.3	107.1	136.4	100.0	107.7	72.7
	중견	71.0	100.0	90.5	90.3	76.5	92.9	79.4
	중소	65.9	78.4	57.4	90.2	41.5	62.5	53.7
지역별	서울	101.6	111.9	98.5	124.5	86.4	97.5	70.6
	지방	54.4	72.3	63.6	79.7	59.8	74.5	66.6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민석(책임연구원·mskang@cerik.re.kr)

새로 제정된 「지방계약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제정 취지 및 입법 과정

- 현재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나 물품구매 등의 계약 규모는 연간 17.7조원에 이르고 있으나(이 중 공사계약은 85%에 해당하는 15.1조원에 달함),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서 일부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고 있음.
- 그러나 노점상 정비, 화훼농가 선정 등 국가에는 없고 지자체에서만 발생하는 계약유형이 상당하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 위주의 사업계약 형태가 다양한 데다 긴급복구가 필요한 공사처럼 기존의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 절차를 적용할 경우 현장의 실정이나 공사의 성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시공상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점도 적지 않았음.
 - 계약 대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현행 「국가계약법」 준용 체제로는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국가계약법령의 준용이 애매할 경우 자의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있고, 지방재정법령과 「국가계약법」 준용이라는 이원적 법령체제로 인해 법집행에 따른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음.
- 이에 따라 행자부는 입찰·계약·시공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계약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방특성에 맞는 계약제도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지방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 이러한 노력은 2004년 12월 정부안으로 제안되어 2005년 6월 30일 국회의결을 통해 새로운 「지방계약법」(「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주요 내용

- 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계약 상대자의 선정절차를 명문화하고,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제9조).
-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사감독을 하던 공무원 외에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그 공사의 감독자로 위촉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하여금 시·군·구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로서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시·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 연간단가계약제는 연초에 사업별·규모별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군(群)을 미리 선정해 놓고 긴급복구 사유 발생시 즉시 업체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약방식으로서 공사계약에서 최초이며, 도로 보수, 관로 복구, 차선 도색, 신호등 유지보수 등이 주대상임.
-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서가 확정되기 전에 표준설계 등에 의한 개략적인 금액으로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는 개산계약(概算契約)제도를 도입함(제27조).
 - 현행 ‘설계 입찰·계약 ⇒ 납품 ⇒ 시공 입찰·계약 ⇒ 시공 ⇒ 대금지급’에서, ‘표준설계 (사전 비치) ⇒ 설계+시공 입찰·계약 ⇒ 설계+시공 ⇒ 대금정산’으로 전환됨.
-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의 체결방법, 경쟁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장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제32조).
- 지자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지자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은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제33조).

■ 하위 법령 작성시 고려사항

- 현재 진행 중인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하위법규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의 고려가 필요함.
 -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부패의 소지를 줄이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담아야 하겠지만, 수의계약의 장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개산계약의 운용과 관련하여 ‘설계+시공 입찰·계약’이 중소기업이나 지역업체의 참여를 사실상 제약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주민참여제 도입을 통한 민원 최소화와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감시시스템 구축은 바람직하지만, 시공에 대한 비전문적·형식적 참여나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며, 심의결과의 반영과 관련하여 지자체장이 ‘특별한 사유’ 요건을 자의적 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두성규(연구위원·skdoo@cerik.re.kr)

고용보험 전자카드제 도입

- 2005년 10월경 수도권 200억원 이상 현장을 대상으로 지역사업 실시 예정 -

■ 고용보험 전자카드 운용 개요

- 전자카드 : 고용보험 전자카드란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정보를 직접 보험자의 전산망에 전달할 수 있는 관리 수단을 의미함. 전자카드는 IC칩이 포함된 스마트카드임.
 - 이것은 마치 전철이나 버스를 탈 때 카드를 리더기에 갖다대는 것과 유사함. 고용보험 전자카드를 소지한 건설일용근로자가 현장에 설치된 리더기에 체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내역을 관리하게 됨.
 - 전자카드에는 근로자의 기본 정보가 입력되고 현장의 단말기에는 사업장 정보가 입력됨. 따라서 전자카드의 체크로 현장 관리자 컴퓨터의 단말기에는 근로자의 근로내역과 사업장의 정보가 결합됨. 여기에 임금을 지불할 때 임금정보만 추가하여 전산망으로 전송하면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가 끝남.
- 리더기 설치 및 신고 : 현장에 여러 건설업체가 공존해도 통상 2대의 리더기가 설치됨. 원칙적으로 각 건설업체는 자신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신고만 하면 됨.
 - 신규 근로자가 들어와 전자카드를 처음 체크하기 이전에 각 건설업체의 고유번호를 먼저 입력시키면 이후부터는 자동적으로 그 건설업체의 근로자로 인식하게 됨.
 - 이렇게 현장의 원수급자 단말기에 입력된 건설업체별 근로자 정보는 인터넷망을 통해 각 건설업체의 현장 단말기 또는 본사의 단말기로 전달됨. 각 근로자의 근로내역 정보를 전달받은 건설업체는 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임금정보를 추가하여 전산망을 통해 피보험자 신고를 마칠 수 있음.
 -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서면신고 서식인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또한 이것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그리고 이직확인서의 기능까지도 포함하고 있음. 만일 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당일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컴퓨터에 의해 강제입력 또는 서면신고를 병행할 수 있음.
- 카드 발급 : 사업주는 중앙고용정보원에 신규 근로자에 대한 전자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관할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전자카드를 발급 받음. 또는 근로자가 직접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자신의 전자카드를 발급 받을 수도 있음.
 - 사업주가 신청할 경우 전자카드가 현장에 도달하는 데에는 이틀이 소요되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즉시 발급도 가능함.

■ 전자카드의 도입 필요성 및 선행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잡은 이동’ 및 ‘잡은 소득 변동’이라는 특성에서 찾을 수 있음.
 - 이동이 잦기 때문에 피보험자 취득 및 상실 신고업무가 많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동이 적은 정규근로자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기존의 서면서식이나 EDI 등이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신고수단으로서는 매우 불편함.
 - 최근에 도입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이동이 잦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만들기는 했으나 이를 접수하는 고용안정센터는 동 신고서를 입력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노동부는 고용보험 전자카드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2004년(전국의 18개 현장)과 2005년 상반기(수도권 5개 현장)에 이미 시범사업을 수행한 바 있음.
 - 현장마다 편차는 있으나 경기도에 위치한 시범사업 현장의 관리자는 ‘근로자들이 전자카드를 들고 와 리더기에 찍기만 하면 현장 관리자들은 거의 할 일이 없을 정도’라고 그 편리함을 높게 평가함. 또한 신규로 근로자가 들어올 경우 건강검진과 안전교육이 끝난 후 배포한 다음 고용보험 전자카드를 ‘현장 출입증’으로 활용하고 있음.
 - 근로자들 역시 처음에는 생소했으나 이것으로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는 스스로 열심히 체크하고 있음.

■ 2005년 10월경으로 예정된 전자카드 지역사업의 내용과 기대 효과

- 2005년 10월경에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소재한 2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임. 약 660개 정도의 현장과 약 25만명의 근로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함.
 - 이 경우 약 80%의 근로자들은 지역사업 대상 내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것으로 판단됨.
 - 전자카드에는 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되고 5,000원의 티머니가 입금된 상태로 배포됨.
 - 지역사업의 리더기 및 전자카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됨.
- 고용보험 전자카드의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효율적인 고용보험 관련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관리비용이 절감될 것임.
 - 실제 노무비에 대한 파악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실제 지불임금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사회보험 적용·징수, 퇴직공제부금의 납부 등 중복업무 일원화 가능성이 제고됨.
 - 건설 노동시장의 정보를 드러나게 해 제반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임.

심규범(연구위원·gbshim@cerik.re.kr)

BTL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변화 및 개선 방안

-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건설업계, 특히 지역 중소 건설업계의 반발이 극한 상황에 이르러, 지난 7월 5일 전국 건설협회 시·도회장의 간담회에서 BTL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대하여 조건부 불참 의사를 의결한 바 있음.
- 이에 대하여 정부는 7월 28일에 국무총리 주재의 회의를 통하여 건설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여,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 폭을 확대하는 한편, 제안비용의 보상을 통하여 초기 투자비의 부담 또한 완화할 방침임.

■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

- 지난 7월 28일, 국무총리 주재의 BTL 민간투자사업 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되어 조정된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주요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BTL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조정 방안
 - 금년도에 BTL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학교시설 중에서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대상사업은 BTL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전국 시·도의 교육청에 권고함.
 - 내년부터는 신축 및 대규모 개축사업은 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증·개축사업과 체육관 시설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함.
 - 학교시설 사업에 대한 중소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단위사업의 규모를 현행 500억원 내외에서 200억~300억원 규모로 하향 조정하여 묶음(bundling) 작업을 시행함.
- 중소 건설업체 우대 방안
 -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기존의 지역 중소 건설업체 시공우대제도와 일정 비율 의무 시공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소규모 사업은 BTL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한편, 재정사업의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재정사업 물량을 유지함.
- 사업 개발의 부담 경감 방안
 - 사업 제안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BLT 대상사업에 대하여 기본계획과 기초 조사를 주무관청이 수행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함.
 - 민간 사업자에게 기본설계 수준 이상의 사업 제안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 제안비용의 일부를 보상함.
- 사업 추진 절차의 내실화 방안

-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민자법인의 구성과 면밀한 설계·조사 등에 기초한 사업제안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고 기간을 2개월 이상 보장하는 한편, 1차 사전심사(PQ) 평가를 2단계 평가와 통합하여 운영함.

■ BTL 민간투자사업의 개선 방안

- BTL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평가 기준의 가격 요소 비중 축소
 -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재의 평가 체계는 정부 지급금 중심의 가격 요소에 편중되어 있어, 민간의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 설계, 시공, 운영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뿐만 아니라, 지나친 가격 경쟁에 기초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경우, 부실 시공을 비롯하여 사업의 부실화가 초래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계획서의 평가 요소에서 가격 요소의 비중을 축소하고, 설계, 건설, 운영 요소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민간의 BTL 사업 제안 허용
 - 단위사업의 규모를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 대상시설의 복합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이는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와 더불어 복합화 시설을 통한 시설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부 부처간의 협조 체계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따라서, 부처간의 협조를 유도하는 한편,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초한 복합화가 가능하도록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민간 제안을 허용하여야 함.
- 재정 대상사업의 BTL 대상으로 전환
 - BTL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주에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과 같이 이미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의 대규모 건설사업을 포함하는 방안이 요구됨.
 - 이 경우,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재정의 일부만이 단기간에 집행되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BTL 대상사업을 확대할 수 있음.
 - 또한, 대형 건설업체는 대규모 BTL 사업으로 유도하고, 중소 건설업체는 적정 규모의 BTL 사업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참여 주체들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규모별 업체들의 업역을 재조정하는 기능이 예상됨.

왕세종(연구위원·sjwang@cerik.re.kr)

미국 환경 분야 건설 시장의 동향¹⁾

■ 지난 10년 간 지속 성장

- 2004년 ENR이 선정한 상위 200대 환경 분야 건설사²⁾들의 총매출은 330억 달러(약 33조 원)로 2003년 31.4억 달러(약 31.4 조원)에서 5% 증가함.
- 선정된 200대 기업 중 67% 이상의 건설사들이 5.4%의 수익률을 올렸음. 이는 2003년도 수익률보다 0.5% 포인트 낮은 수치이며, 이런 수익률 하락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 미국 상위 10대 환경 분야 건설사는 크게 환경 전문 건설사와 대형 건설사로 구분됨. 환경 전문 건설사는 회사 매출액의 70% 이상을 환경사업에서 창출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의 매출 비중도 대형 건설사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한편 대형 건설사는 사업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환경 분야의 매출 비중을 관리하고 있음.

미국 상위 10대 환경 분야 건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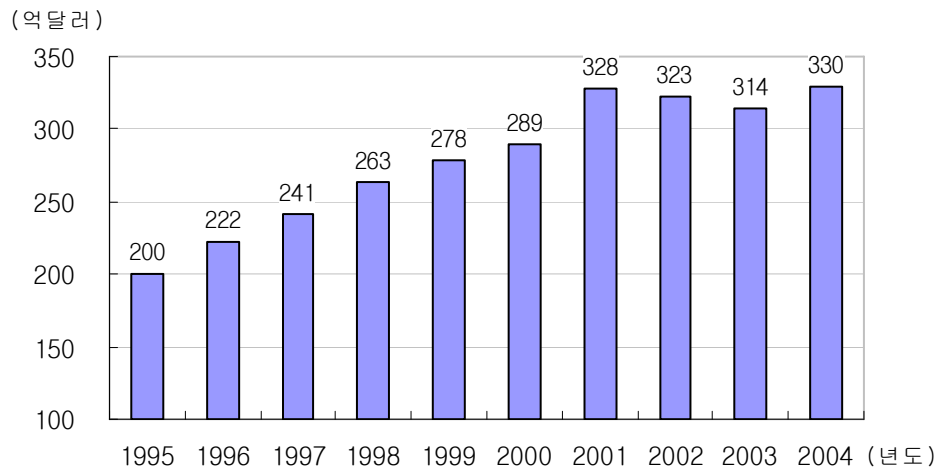
순위		회 사 명	2004년 환경 분야 매출		
2004	2003		총매출 (백만 달러)	회사 매출 비중(%)	해외 매출 비중(%)
1	2	BECHTEL, San Francisco, Calif.	3,144.2	19	16
2	3	CH2M HILL COS. LTD, Englewood, Colo.	2,555.5	81	11
3	신규	VELIA WATER NORTH AMERICA, Houston, Texas	1,999.2	100	7
4	4	URS CORP., San Francisco, Calif.	1,300.0	38	22
5	5	WASHINGTON GROUP INTERNATIONAL, Boise, Idaho	1,123.9	37	6
6	신규	EARTH TECH INC., Long Beach, Calif..	1,102.0	77	49
7	9	FLUOR CORP., Aliso Viejo, Calif.	1,057.2	11	2
8	10	TETRA TECH INC., Pasadena, Calif..	1,034.8	71	1
9	6	MWH, Broomfield, Colo.	958.2	97	33
10	7	THE SHAW GROUP INC., Baton Rouge, La.	898.5	29	1

- ENR이 독립된 건설시장으로서 환경 분야의 매출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도 부터이며, 그 당시 200억 달러의 매출 규모로 출발하였던 환경 분야 건설시장은 이후 10년간 연평균 6.5% 정도의 꾸준한 매출 증가세를 기록하였음.
- 1996년부터 6년 간 매출 증가율은 9%대를 유지하였고, 2001년도에는 300억 달러를 넘어선 328억 달러의 매출 규모를 달성하였음. 이후 2년 동안의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2003년도에는 다소 감소하여 314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음.

1) 「The Top 200 Environmental Firms」(ENR, July 4, 2005)에 수록된 내용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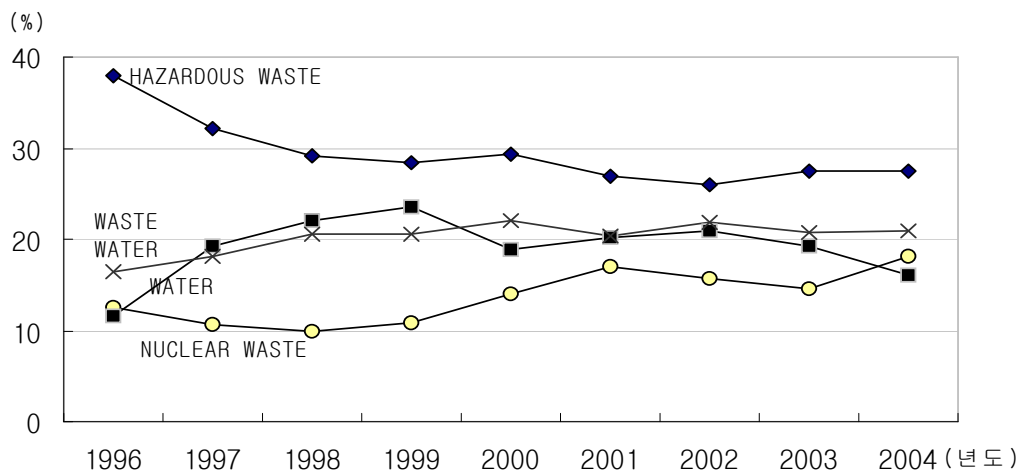
2) '환경 분야 건설사'는 관련 설계사, 건설사, 사업관리(PM) 전문회사, 기자재 제작업체, 전문 연구기관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함.

미국 환경분야 건설시장 추이



- 미국 환경 분야의 건설시장은 유해성 폐기물(hazardous waste), 방사능 폐기물(nuclear waste), 폐수처리(wastewater treatment), 수질관리(water quality)의 4개 부문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세부 부문별 시장 점유율 추이



■ 공공부문의 시장 위축 예상

- 미국 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재정부족, 미국 경제의 침체, 현 정부의 보수적인 환경정책 등으로 인해, 향후 공공부문의 환경 분야 건설시장은 지난 10년 간과 같은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음. 따라서 다수의 건설사는 대체시장으로 민간 환경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민간 발주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서 수주를 올리고

있음.

- 미 공공기관은 환경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요구하고 있음. 미 환경보호청(EPA)은 향후 20년 동안의 수자원 관련 환경 예산만도 약 2,770억 달러(약 277조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 미국 수자원협회는 휘발유 첨가제 MTBE에 의해 오염된 토지와 지하수를 복원하기 위해 적게는 250억 달러에서 많게는 332억 달러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및 재건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기반시설의 신규 건설 및 성능개선 사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감소될 전망이다.
- 공공부문의 발주 및 계약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 패키지는 대형화되고 계약금액은 훨씬 커졌으나, 사업 이익은 오히려 감소되어 환경 분야 건설사업 리스크는 더욱 높아졌음. 따라서 컨소시엄이나 조인트벤처 형태의 계약자 구성이 일반적임.
- 특히 다년도에 걸친 최고한도액(Guaranteed Maximum Price, GMP) 계약방식 하에서는 계약자가 당해 계약의 업무 범위를 사업 초기 단계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설정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됨. 그러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설계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

- 환경 분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도적인 무관심과 법원의 반환경적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환경 분야 기업들은 하천 생태 복원과 지구 온난화 현상과 같은 환경 이슈의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시장 창출을 회사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 철거 후의 부지 복원 사업은 향후 10년 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 건설사들은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영국이 첫 해외 현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선정된 200대 건설사의 아시아 지역 매출은 유럽 지역의 25%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중국 시장은 그 잠재력이 크게 평가되고 있음. 몇몇 미국 건설사는 이러한 중국 환경 분야 건설시장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 중 Black & Veatch사는 외자기업 형태의 중국 현지법인을 안착 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되고 있음.

이영환(연구위원-yhlee@cerik.re.kr)·성유경(연구원-sungyk@cerik.re.kr)

SOC 재정 투자 더 필요하다

기획예산처의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돼 논의 중이다. 빠듯한 살림에 알뜰하게 지출해 수지를 맞추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 물론 연평균 5%대 경제성장률과 20%대 조세부담률을 전제로 한 다소 의욕적인 측면도 있다. 정부가 계획을 세우면서 균형 재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문제는 꼭 필요한 지출을 가리는 재원 배분 구조에서 나타난다. 재정의 큰 방향이 복지에 대한 재정 지출을 늘리고 대신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으로 잡혀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복지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근접시키기 위해 SOC 예산은 사실상 동결한다는 것이다. 자칫 1만 달러 경제에서 3만 달러 수준의 복지 정책을 지향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SOC 정책 방향이 전환된 배경에는 그 동안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시설이 상당 수준 확충되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 SOC 시설은 OECD 국가 중 중위권 수준으로 아직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OECD 국가와 비교해볼 때 국토 면적당 도로 연장은 28개국 중 15위, 국토 면적당 철도 연장은 21개국 중 13위 수준이다. 정부는 부족한 SOC 예산을 대신해 민간 자본에 의존, SOC 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근간의 추세를 감안하면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민간 자본을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공공이 제공하는 기초적인 서비스의 사용료가 높아지며 또한 대형 건설업체 위주로 참여가 이루어져 건설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올해부터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BTL 사업은 외상 공사를 하고 분할 상환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더욱 걱정된다. 이미 SOC 재정 투자 대비 민간 투자 비중은 2002년에 두 자릿수를 넘어섰고 앞으로의 BTL 사업을 감안하면 15% 이상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자사업이 가장 활발한 영국도 민자 비중이 11~1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보다 민간 투자를 확대할 여지는 크지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다. 민간투자는 재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SOC에 대한 재정투자는 지속돼야 한다. SOC 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대를 가져와 국민의 소득과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정부의 투자여력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이 필요하다.

김흥수(부원장:infra@cerik.re.kr)

■ 보고서 발간 안내

- 부실건설업체 수 추정 및 퇴출시 개선효과(건설산업동향, 2005-9)
 - 부실건설업체 수 추정결과 및 부실기업 퇴출시 정상기업의 실적 개선효과 분석
 - 정책적 시사점
- 국내 용역형 CM/PM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연구보고서, 2005-5)
 - 과거와 현재의 CM/PM의 수요 및 현황
 - 국내외 CM/PM 시장 현황 분석 및 전망
 - CM/PM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